‘전력 지산지소’ 전남광주시, 분산에너지특구 추진

행암·화정·오룡동 3곳 29일까지 의견 수렴
정부 6월 도입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형’
발전사업자·전기사용자간 전력 거래 가능
주민 에너지 자립·수익 창출 기반 등 관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남구 행암동, 서구 화정동, 북구 오룡동 일원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자체적으로 저장·소비하고 거래하는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전력계통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주민 에너지 자립과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30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계획안’을 공고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주민·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저장·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산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전력 직접거래를 비롯해 에너지 신사업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시가 이번에 지정 신청을 추진하는 곳은 남구 행암동, 서구 화정동, 북구 오룡동 일원 등 광주권 3곳이다.

신청 유형은 정부가 올해 6월 새로 도입한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형’이다. 동일 변전소 또는 생활구역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모델로 지역 내 분산에너지의 생산과 저장·소비·거래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 중심의 전력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전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에너지 자립과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암동·오룡동은 옛 광주시가 지난해에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했던 지역이다.

옛 광주시는 에너지 관련 기관·기업과 협력해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한 도심형 분산에너지 모델 구축을 추진해왔다.

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육성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한편 전문가 논의를 통해 특화지역 지정 전략과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 모델 등을 검토했다.

옛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해 해남·영암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시는 다음 달 29일까지 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지정 신청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계획안은 특별시 무안청사와 광주청사, 서구·남구·북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서는 해당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특화지역 계획을 심사해 후보 지역을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분산에너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특화지역을 최종 지정한다. /변은진 기자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개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가 30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개막해 황기연 전남광주특별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 ‘시민참여형 청렴행정 테스트’ 운영

투명·신속·공감·공정·참여 5개 유형
참여 데이터 정책·서비스 개선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시민이 참여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렴행정의 가치를 진단하고 이에 맞는 시정과 행정 서비스까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는 ‘트러스트(TRUST) 청렴행정 유형 테스트’ 콘텐츠를 개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유형 테스트는 기존의 영상·포스터 중심의 청렴 홍보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질문에 답하며 결과를 확인하는 참여·체험형 청렴행정 문화 확산 콘텐츠다.

청렴의 의미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해 청렴행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개발됐다.

트러스트 청렴행정 유형 테스트는 시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정 가치를 투명(Transparent), 신속(Responsive), 공감(Understanding), 공정(Service Fair), 참여(Together)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성했다.

시민은 ‘민원 처리 시 가장 중요한 요소’, ‘행정을 신뢰하게 되는 순간’, ‘내가 바라는 공무원의 모습’ 등의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이 지향하는 청렴행정 가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테스트는 단순한 성향 진단에 그치지 않고 각 유형과 연계된 실제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함께 안내한다.

이를 통해 시민은 청렴의 가치가 시정과 행정서비스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유형별로 ▲투명형은 정보공개제도·사전정보공표 ▲신속형은 적극행정·바로예약 ▲공감형은 시민의 소리·시민소통 플랫폼 ▲공정형은 부패알릴레오·청렴포털 ▲참여형은 주민참여 예산제·시민참여 정책 등 특별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안내한다.

테스트는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특별시 누리집(시정소식→팝업게시판)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별시는 축적된 참여 데이터를 분석해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정 가치를 파악하고 이를 청렴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임태형 감사담당관은 “청렴을 어렵고 딱딱한 행정 영역이 아닌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전달하기 위해 이번 콘텐츠를 기획했다”며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행정을 구현하고 신뢰받는 행정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자율”vs“일방” 공공기관 통합 ‘삐걱’

도시공사·개발공사…市 “기관 주도”
도시공사 노조는 “의견 반영 안돼”
불이익 방지 조항 조례안서 빠져
공식 사과·중단 촉구…진통 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통합을 둘러싸고 특별시와 광주도시공사 노동조합의 협의 여부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특별시는 ‘기관 주도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통합’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 노조는 통합 방향과 조례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광주도시공사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 일방적인 공공기관 통합 추진을 중단하고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의 통합 방향이 당초 ‘기능 조정’에서 ‘완전 통합’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21일 특별시 주관으로 양 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한 TF 회의가 열렸지만 자료와 의제가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고, 당시 노조위원장도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이틀 뒤인 23일 양 공사 기관장은 민형배 시장에게 전남개발공사는 에너지 분야, 광주도시공사는 개발 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기능 조정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를 공식적인 통합 방향으로 받아들여 조합원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8월 특별시 비서실장 주재 양 공사 임원 회의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통합공사 설립 조례안 마련 과정에서도 이견이 드러났다. 노조는 직원 불이익을 막기 위해 직위·직급·직책·임금·전보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와 공사 통합 노사정협의체 설치·운영 등을 조례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요구안은 지난 2일 양 공사 노사 협의를 거쳐 특별시에 제출됐지만, 17일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는 삭제 경위와 사유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별시는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통합 대상 기관별 TF를 통해 기능·조직체계·통합 방식·조례·정관·노사 문제 등을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직원 고용승계와 예산·정원상 불이익 방지도 통합 원칙으로 제시했다.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기존 법인을 각각 해산한 뒤 ‘전남광주개발에너지공사’를 새로 설립하는 신설 합병 방식으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박정팔 광주도시공사 노조위원장은 “충분한 협의 없이 통합 방향을 바꾸고 조례안의 핵심 내용까지 삭제해 놓고 ‘자율적인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식 사과와 통합 추진 중단, 삭제 조항의 복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특별시 관계자는 “해당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노조 의견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기관장의 인사권과 기관 자율성을 조례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검토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에도 노사 간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